

「일본의 국제화와 개혁」 심포지움 총괄 보고서

한 영 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일본의 국제화와 정치·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관한 다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주제 발표 및 토론 후에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 발표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관계」 (서울대 장달중)

냉전 체제 붕괴 후의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 국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일본은 종래의 대미 의존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일본의 국가 의도는 무엇인가? 나아가, 일본이 전략적 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는 정신상태는 메이지 시대와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메이지 이래 일본은 국제관계에서 주로 '주어진 국제 질서에 적응'하는 행동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체제 내적 행동 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할 경우, 일본과 국제사회 간에는 긴장이 고조된다.

향후 일본 국가가 취할 방향으로서 정치·외교-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 평화국가화의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중 평화국가화 노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사회당의 자위대 합헌 인정에서 보듯이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것 같다. 걸프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일본이 떠맡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국제정치·군사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른바 '보통국가'화의 방향이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의 '국제화'는 곧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공존의 틀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화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시장 개방. 이것은 일본사회 자체와 일본의 정책 결정 기구의 틀을 국제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의 방위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 셋째, 일본 사회·문화의 국제화. 즉, 배타적이고 예외주의적인 태도의 극복.

시장 개방과 방위 책임, 문화의 국제화를 둘러싼 일본의 새로운 움직임은 미국과의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위에 경제·문화적 상호 의존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미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향 전환을 시도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일

본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김호섭 교수의 토론〉

장교수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발표에서는 일본의 국가 의도는 무엇이며 국가 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도출하고 있지 않으나, 결론에서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논문의 확대·완성이 기대된다.

둘째, 장교수는 메이지 기와 현재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세계와의 갈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두 시기 사이에는, 일례를 들자면 ‘정보화’ 같이, 질적인 차이점이 더 많지 않은가?

셋째, 일본 국가 발전 방향의 세 가지 가능성을 그려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본 정치의 주요 테마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본론으로 하여 각 가능성에 대해, 역사적 배경, 국가의 이상적 형태, 각 주장자의 국가 발전 의도 및 경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좋겠다.

넷째, 장교수는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이 이시하라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 발전의 세 가지 전개 방향에서는 서로 다른 패턴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닐까?

다섯째, 국가 발전 방향의 세 가지 가능성 중 평화국가화 노선은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분석한 데 대해, 아직 현실성은 존재한다고 보고, 두번째와 세번째 방향의 타협적 경로가 현실적인 전개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장교수 자신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다. 또, ‘보통국가’론이 일본에서 통설인 것처럼 기술했는데 아직 통설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여섯째, 걸프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대미관계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대미관계의 기조는 1945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바뀌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확대가 바람직한가,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해준다. 장교수는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한데, ‘군사대국’의 정의가 필요하다. 군사대국화를 막는 일본 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억지 요인들의 파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945년 이후 계속되어 온 현상이다. 다만 그것이 미일 안보조약 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임천석 박사의 토론〉

그동안 주어진 질서 속에서만 움직여 온 일본이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롭게 수행해

야 할 역할에 대해, 정치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모델이 없어졌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의 문제 모두에서 혼란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교수는 최근 일본의 상황을 과거에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았던 전전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사명이 한국과 중국에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논의이다. 그 가능성을 일본 사회 내적 요인들을 고려하며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 내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1부 제2 발표 「일본의 시장 개방과 지역 경제권 통합」 (고려대 조성원)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 경제권 통합과 시장 개방은 일본의 중대한 현안 문제이다. 먼저, APEC의 성립 과정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 통합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태 지역 경제권의 형성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아시아 지역 전반의 고성장 및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의존관계 심화라는 경제 실태와, 아태 지역 내부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국지경제권의 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ASEAN,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아태 경제권 형성을 자국 경제력 신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으로써 이들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9년 APEC의 발족으로 지역 경제권 통합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현실화되기에 이른 것인데, 이전부터 일본에는 아태 지역 경제권 통합 구상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1959년 코오노 이치로(河野一郎)의 「태평양 연합」 구상 이래 아태 지역 경제권 통합 구상이 잇달아 제시되어 1967년에는 일본의 이니셔티브 하에 민간 재계인의 「태평양경제위원회」(PBEC)와 연구자를 위한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가 설치되기도 했다. 69-70년을 경계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지역 경제권에 대한 관심은 오일 쇼크 이후 부활되어, 80년대 들어서 지역 경제권 구상이 본격화되었다. 79년 총리부에 설치된 「환태평양 연대」 연구 그룹의 좌장 오라이(大來)는, 선진 5개국과 ASEAN 5개국 및 한국이 참여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발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PECC는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 기구였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이후에는 APEC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APEC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국 주도의 강인한 추진 방식에 대한 ASEAN의 우려, 둘째, NAFTA를 통한 미대륙 지역주의의 확대를 피하는 동시에 APEC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아시아 시장도 확보해두려는 미국의 이기적이고 모순된 정책, 셋째, APEC 자체의 지역주의적 색채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참가국들 사이에 APEC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은 아직 뚜렷이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나갈 것인가가 APEC의 전개 방향을 규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역 경제권 통합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현안인 시장 개방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과 과제는 무엇인가?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책으로 규제완화와 수입량의 목표 설정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요구이다.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자구 노력이 요청된다.

한편, 일본은 자유무역체제에 의해 가장 큰 이득을 얻은 나라로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구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또한 시장 개방 조치가 일본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여,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는 정당하게 거부하면서도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시야에서 자발적으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본의 시장 개방은 일본 경제의 진정한 합리화 및 아시아 각국과의 협조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관건이다. 나아가 NIES·ASEAN도 경제성장에 걸맞는 규제완화와 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호섭 교수의 토론〉

조교수의 발표에 대해 세 가지 정도 의문이 있다.

첫째,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했는데, 정치적·정책적인 측면과 연결된 부분의 분석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시장 개방 문제를 포함한 무역 불균형 해소책에 관한 논의는 일본측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 같다.

셋째, 아태 지역 경제권 형성 배경에 관해 아시아 경제권과 유럽 경제권을 비교하여 아시아 쪽이 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점이나 일본과 독일이 미국 및 소련을 추월했다는 점 등은 異論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임천석 박사의 토론〉

시장 개방과 지역경제권 통합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대미 의존도는 약화되고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일본의 시장 개방 없이는 이 지역 경제권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시장 개방이 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발전에 중대한 관건이 되리라는 낙관적인 견해에는 의문이 든다. 80년대 말까지도 NIES는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졌으나, 최근에 변화되어, 일본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대만과 일본, 중국과 일본, 동남아와 일본은 서로 다른 발전 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시장 개방이 아시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시야에 넣었으면 한다.

〈조성원 교수의 답변〉

우선 시장 개방과 지역경제권 통합의 관련성이 제대로 서술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EAEC, NAFTA와 관련해서 일본은 상당히 연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임박사의 지적에 대해 발표자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EAEC는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고, 미국은 APEC 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EAEC를 약화시키려는 입장인 것 같다. 향후 발전 방향은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으나, 일본 자신은 미국의 노선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APEC과 NAFTA를 별도로 존속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 NAFTA를 확대시키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NAFTA가 중남미로 확대되면 APEC 내에서의 미국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제2부 제1 발표 「일본의 행정 규제 완화」 (서울대 박세일)

93년 호소가와 연립정부의 성립 이래, 21세기를 대비하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행정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합창이 일고 있다. 규제완화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개혁연구회, 경제동우회, 민간 연구모임 등의 몇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 파악되는데, 이번 규제완화론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규제완화론의 정치적 의의는, 그것이 55년체제 성립 이래 형성되어 온 관 우위의 '철의 삼각형', 즉, 재계 등의 이익집단과 자민당 정부조사회의 족의원, 그리고 대장성 및 통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 기구 등 政·官·業 삼자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다. 93년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이 '철의 삼각형'이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의 하나가 바로 규제완화론이다.

규제완화론의 경제적 의의는, 일본경제가 일대 구조 전환기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혹은 지구촌 경제화의 진전,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성숙화 단계로의 진입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틀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는 중상주의적 경제 질서로부터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따라잡기'형 경제에서 '개척자'형 경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며, 규제완화론은 바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년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은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역할 및 그와 관련된 정부 조직의 개편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규제완화가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론적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 성과는 별로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천이 잘 안되는 이유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와 정치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 부족, 정치에 대한 행정 관료의 힘의 우위, 국민과 기업의 정부 의존적·규제 의

존적 의식 등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는 일본 경제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이며 국제적인 압력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때문에 개혁은 급진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의 형태를 띠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진순 박사 토론〉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 법제도는 일본 것을 모방한 것이 많고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일본의 규제완화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교수의 논문은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논리적 분석이 불철저하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박교수는 규제완화론의 대상을 중상주의적 경제 질서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앙관리 경제 질서’의 잔재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일본의 규제들의 원형은 1938년에 내려진 국가총동원령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경제 영역에 관료가 방대하게 개입하는 중앙 관리 경제 질서이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후에도 ‘총력전’에서 ‘고도성장’으로 목적만 바꾸었을 뿐, 이른바 ‘40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관제 카르텔을 매개로 한 광범위한 행정 지도를 행했으며, 이는 고도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이 계획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침해받기 일쑤인데다가, 행정만능주의가 만연하여 일본은 행정 규제만 일만 건이 넘는 지옥에 빠져들어갔다. 한편,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상주의 경제 정책은 60년대부터 서서히 청산되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거의 청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일본의 규제완화론은 중앙 관리 경제 질서 이론에 의해 해명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규제완화론의 특수성을 밝혀주었으면 한다. 규제완화는 70년대 말 이후 세계적 추세인데, 일본의 규제완화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명백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 전투 조직처럼 행동한다. 이런 일본 시스템은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체제이다. 국제화가 규제완화의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규제완화의 주 대상이 금융·건설·농업·유통업 등 비제조업에 집중된 것은 40년체제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국식 규제완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에르하르트 식 ‘탈통제 정책’이 아닐까?

셋째,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해 박교수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일본은 집단주의적 전통이 뿌리깊고 진정한 자유주의를 경험한 일이 없으며 개인을 집단에 매몰시킨 대가로 생계와 안전을 보장받는 데 익숙해진 문화 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상일 교수 토론〉

박교수의 발표에 대해 의문점이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제기하겠다.

첫째,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제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일본의 규제는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심각한 정도인가? 일본 사회는 규제를 받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규제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규제를 풀 때 새로운 발전을 위해 국력을 또 다시 결집시킬 수 있을까?

둘째, 일본은 관행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며, 보통 상당한 시간을 들여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을 바꾼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규제완화는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자유무역 체제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보수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국제 질서는 개방적이면서도 유동적이다. 상황이 바뀌면 규제 강화로 되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규제완화라는 것은 국내 정치 질서 및 국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으로만은 파악할 수 없다.

셋째, 박교수는 일본의 관료 집단이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일본에서는 관료 집단이 비교적 깨끗하고 유능한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력 약화가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박교수의 답변〉

(이진순 박사의 토론에 대해)

우선, '중상주의 경제 질서'와 '중앙 관리 경제 질서'라는 개념 문제에 관해, 전자는 역사적 개념이고 후자는 이론적 개념으로서 후자의 반대는 '분권적 시장경제 체제'이고, 전자에 대응되는 것은 다음 단계로 올 '경제적 자유주의'일 것이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리고자 한 것은 민간 부분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플래닝 개념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자원을 끌어나가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중앙관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일본과 서구의 규제완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이다. 일본의 규제완화는 구체적인 경제 과정에 대한 산업 정책을 더이상 하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식의 산업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는 주로 공기업 부문, 규제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번째로, 일본의 규제 혹은 중상주의를 55년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40년체제로 볼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는 55년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일부의 경제학자, 특히 경제사학자들은 1920, 30년대 일본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구미와 같았으며, 현재 일본의 자본주의는 40년대 통제 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동의한다.

(한상일 교수의 토론에 대해)

먼저,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가 국제화될수록 개별 국가의 산업 정책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축소되며, WTO 체제로 갈수록 경제를 규율하는 룰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자유경쟁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관료집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전과 같은 관료의 체질과 사고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외부에서는 경제 국제화의 압력이, 내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이다.

셋째, 규제에 의해 성장하고 그에 길들여진 일본경제가 규제완화에 의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전통·문화의 뿌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일본사회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가리라고 본다.

넷째, 규제완화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클 때는 정부의 개입이 어렵지만, 시장이 작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순기능도 많다. 그런데 국제화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고 일본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국민국가의 성격은 바뀔 수밖에 없다. 'rule making' 또는 'rule monitoring' 쪽으로 바뀔 것이다.

(방청석에서 이숙종 박사의 질문)

일본에서 규제완화에 관한 형식적·법률적인 조치는 70년대에 이미 시행되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규제완화의 대합창은 버블 붕괴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는 행정 규제도 규제완화도 모두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소기업은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고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다. 또, 규제완화는 비제조업 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다. 규제완화 정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산업구조의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섹터 별로 deregulation politics를 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박교수 답변)

좋은 지적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일본은 무역·금융 분야의 자율화는 끊임없이 해왔다. 행정 규제 완화는 이전부터 큰 흐름으로서 존재해 왔는데, 최근에 대합창이 일어나

게 된 것은 자민당의 붕괴, 통상 압력의 강화 및 내용 변화, 내외 가격차(구체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과 관련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금융 등 몇몇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왔지만, 아직 많은 부분, 특히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에 각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내외 가격차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70, 80년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식이다.

또 통상 압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 관료-정치가-기업의 힘 관계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이와 관련된 압력이 강화되었다.

제3부 제1 발표 「일본의 지방화와 분권」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이종구)

최근 일본의 정치개혁론 또는 사회개조론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지방화 논의이다.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또는 단순한 외형적 지역발전이 아닌 지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방화가 주장되어 지방 분권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지방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다양하지만, 그 기저에는 국가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 추세는 종래 주권 국가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권한의 재배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사회자본이나 환경 문제 등에 관해서도 주권 국가 단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 논의에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대는 자치체의 역할 증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사회 재조직 방향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지방 분권은 단순한 행정의 효율화나 하급 행정 단위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 이전과는 구분되어야 할 문제이다. 고도성장 말기에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붐을 이루며 성립되었던 혁신자치체들이 속속 몰락해간 경험은, 지금의 지방화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년대 말부터 보수계의 자치체 주장들이 자치체의 행·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을 요구해왔는데, 관료와 신보수주의적 사회개조론자들이 중심이 된 지방화 논의와 생활인의 자발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지방자치체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직적 계열화된 의사 결정 구조에서 자율적 지역 단위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과 양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경수 교수 토론〉

이박사의 발표는 지방·국제화를 너무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대마도의 이즈하라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과소화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이 지역은 살아남기 위해 구산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아리랑 마쓰리라든가 조선통신사 행렬 같은 이벤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의 국제화·지역 정체성 형성과 지방화 문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권, 자치 개념과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중앙과 대립되는 차원에서 지방을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과소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방, 그리고 지방과 국제가 연결되는 문제를 너무 중앙에 기대서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구 박사 답변〉

지방화 문제를 너무 높은 곳에서만 보지 말고 농촌 과소화라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을 통해 보자는 전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 과소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80년대 후반 이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인 이벤트나 일촌일품운동 같은 것을 기획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빠져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농촌에 남아 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개선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부구조적인 문제로서, 문화적인 이벤트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소화의 근본 원인은 그동안 많은 비판이 나온 일극집중 구조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사회 간접자본이나 기반 시설의 건설은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서, 결국 사람이 농촌에서 산업노동력화되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다극분권화 체제에서는 성장보다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재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하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노인복지 시설 같은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더라도 기능 복합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직화된 관료 체제와 중앙 관리 체제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지방화·분권화의 문제는 말단 행정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부 제2 발표 「일본의 국제화와 시민운동」 (성심여대 이시재)

일본의 사회운동·시민운동은 혁신정당과 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에서 실망한 전후의 이상주의자들이 전후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시민을 조직화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오늘날 일본의 시민운동은 주로 지역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동원되는 주민운동과 달리 전국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나거나 국제적인 문맥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은 일본 경제·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PARC)가 1989년에 전개한 「People's Plan 21(PP21)」은 국제화와 관련된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PP21은 아시아태평양의 민중과 더불어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의 연합」을 형성한다는 취지의 운동으로서, 일본 전역의 시민운동·주민운동을 연결하여 일본 열도를 종단하는 시민집회와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시민집회에서는 정부의 개발 원조를 비판하고 민간 단체들에 의한 풀뿌리 원조 운동의 창설을 결의했다. PP21 운동은 92년 태국에서 두번째 캠페인을 개최하고 중남미·남아시아 등에서는 지역 PP21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운동은 냉전 후 민중에 의한 가장 중요하고 대안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국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밖에 반핵 정보센터(CNIC), 생활클럽생협의 국제화 운동, 자치체 ODA, 풀뿌리 원조 운동, Alter-trade 등 개발과 원조·평화에 관련된 운동, 80년대 이래 급증한 국내의 외국인을 지원하는 운동, 환경과 인권에 관련된 운동들이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규모와 영향력 등에 한계가 있어서 정치구조나 사회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로 많은 시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네트워크형 조직 형태를 지향하고, 경제적·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조직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지향하고 자원봉사 정신·도덕적 결백성·명예를 존중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를 입수, 분석, 정리하여 관련된 전문 지식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시민운동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더이상 전국적인 연대와 통일 행동을 실현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참여가 극히 부진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시민운동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국제화와 개혁의 흐름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지식의 체고, 국제적인 연대 활동, 국내 영향력 행사 노력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수영 교수 토론〉

이교수의 발표는 시민운동의 배경에 대해 잘 평가해주었고 역사적인 맥락을 잘 정리 해주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

우선, 시민운동의 정의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첫째,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의 구별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만 논하고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의 경우 주민

운동과 중복된다. 주민운동은 지역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전국적인 수준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구별하는 기준을 좀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제시되었으면 한다.

둘째, 시민운동 개념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교수는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때 시민사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교수는 일본의 국력, 경제력, 문화 발전 상황 등을 볼 때 시민운동이 좀더 활발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 발전 단계에 대응해서 후기산업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시민운동인가? 시민운동은 근대화·탈근대화 현상과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이고 고상한 목적을 갖는 운동이 시민운동인지,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개념 정의를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다음으로, 일본 시민운동의 일본적인 특성에 대해 묻고 싶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작은 문제들에 관해서는 잘 되는 반면, 지구보존이라든가 자원보존운동 같이 세계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전개해야 할 운동은 사회에 뿌리를 못 내리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나라들과 같은 자원보존운동을 펴나가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종교적 배경도 일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서구 시민운동의 기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깔려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이상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의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목적이 순수해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또, 일본의 종교는 신토이즘이든 불교든 국수주의적이고 내쇼널리스트틱하다는 점도 일본의 시민운동이 전 세계적 운동에 동참하기 어려운 요인이 아닐까?

〈이시재 교수의 답변〉

우선, 시민운동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 논문에서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해 다루었을 뿐 시민운동 자체를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일본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일본 자신이 자원을 많이 쓰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자원이 고갈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일본이다. 사회운동은 사회적 현상이다. 일본에서 보편성을 갖는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시민사회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아직 회사 중심, 지역 중심, 가족 중심 사회이며 보편적인 문제, 예를 들어 PKO 같은 것에 대해 일반 지역 주민은 관심이 별로 없다.

종합 토론

발표와 각 발표에 대한 토론이 끝난 뒤 종합 토론이 있었다. 종합 토론에서는 우선 사회를 맡은 서울대 김용덕 교수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냉전 후의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앞으로 평화국가로 나아갈지 아니면 또하나의 위협적 국가로 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돈 상태에서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둘째, 이같은 일본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및 다른 외국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셋째,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국민의식이 지구적·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국제화·지방화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본의 시민운동은 분산적·고립적이며 후속 세대가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민운동에 대해 어떤 평가와 전망을 할 수 있을까?

종합 토론은 이 네 문제를 축으로 진행되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대 이상희 교수〉

우선, 일본의 시민운동에 젊은 세대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전전 세대 혹은 전후에 성인으로 자란 40대 이상의 경우, 정치체제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일본의 체제와 자본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 의식을 갖는 데 반해, 젊은 세대는 체제로부터 피해를 덜 입은 세대여서 시민운동의 실질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둘째, 일본의 시민운동은 국제화가 덜 되었다든가 자질구레한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지만, 도덕적 결백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도덕성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호소력이 커지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보편적인 문제에 관한 일본 국민의 의식 개혁 문제는 양면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다지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성심여대 이시재 교수〉

일본의 시민운동에서 세대 단절 문제는 심각한데 이에 대해 또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일본의 사회학자 見田는 reality의 반대말로는 ideal, dream, fictio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reality는 1945-60년대 일본을 지배했고, dream은 60-70년대에, fiction은 오늘날 일

본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고매한 이상이나 꿈을 추구해서라기보다는 재미있고 멋지다라는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리우의 환경회의에 참가한 한 젊은이는 해안가의 예쁜 돌고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오늘날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이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과소평가할 건 아니고 이상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방청석에서 小林 교수가 오늘 토론에서 주로 논의된 국제화의 문맥과 비교하여, 일본사회에서 국제화·국제화 의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된 것은 근년 외국인의 급격한 증대와 함께 일본인·일본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일본사회에서의 국제화 논의의 문맥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한영혜, 서울대 농업생명대학 강사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0-206

Tel : 502-6727(H)